

[발표 1]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양태 - 빈곤을 통해본 구(舊)사회위험의 존속과 신(新)사회위험의 확대 -

윤홍식(전북대)
조막래(전북대 박사과정)

1. 문제제기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회위험의 확산은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복지국가의 역할이 소득분배에서 사회서비스 확대로 전환되어야한다는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투자국가(또는 전략), 사회서비스국가, 적극적 사회정책 등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한 정책대응방식을 모색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의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벗어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한국사회의 상황은 산업화된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이들 대안들이 제기된 상황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물론 한국사회도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회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위 구사회위험이라고 지칭되는 노령, 실업 등으로 인한 문제 또한 여전히 주요한 사회위험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해 본 논의는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빈곤문제를 신·구사회위험과 관련된 요인들을 통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신사회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사회위험도 여전히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남아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한국복지국가의 과제는 단순히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구사회위험에 대한 대응 또한 필수적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신사회위험의 개념

신사회위험에 관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새롭다'라는 의미는 절대적 개념이기 보다는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개별 복지국가에서 새롭게 확산되는 위험을 신사회위험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위험을 경제사회적 발전 정도가 모두 상이한 국가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성의 점증하는 노동시장 참여로 인해 보편적 생계부양자 가구로의 전환, 고령사회의 도래, 인구감소의 위험,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비전형적인 일자리의 증가, 복지서비스의 민영화로 인한 계층화 등은 대부분의 산업화된 복지국가가 직면한 공통의 사회위험이라는 점이다. 전통적 복지국가의 기반이 되었던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복지확대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했던 기본적 전제(남성생계부양자모델, 완전고용, 유효 수요모델 등)들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 복지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위험이 확대되고 이렇게 새롭게 확대된 사회위험을 신사회위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어떻게 분석하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원 자료는 제3차년도, 제7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2006년도 한국복지실태조사이다. 먼저 신사회위험을 대표하는 변수들은 돌봄과 관련된 위험은 가구의 돌봄·부양부담을 대변할 수 있는 세 가지 변수: ① 6세 미만 아동), ② 65세 이상 노인(유=1, 무=0), ③ 학령기자녀(유=1, 무=0). 가족변화와 관련된 사회위험은 가구의 생계부양형태의 변화와 가구구성형태의 변화에 주목했다. 생계부양형태는 남성일인생계부양가구와 이인생계부양가구를 비교했다. ④ 생계부양형태(기혼이인생계부양가구, 기혼일인생계부양가구, 한부모가구, 미혼단독가구, 제삼생계부양가구³⁾). 가족의 변화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결혼해체를 반영하기 위한 변수를 설정했다. ⑤ 결혼(혼인)상태(미혼, 기혼유배우, 별거·이혼·사별). 노동시장 변화와 관련된 신사회위험은 가구주의 고용상의 지위를 통해 비교했다: ⑥가구주의 고용상의 지위(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 다음으로 구사회위험과 관련된 변수는 가구주의 취업여부와 가구주의 노령여부로 설정했다. ⑦ 가구주의 고용상태(취업=1, 비취업=0). 가구주의 노령여부 또한 가구주의 노동시장 퇴출과 임금소득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통적 사회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⑧ 가구주의 노령여부(65세 이상=1, 65세 미만=0).

분석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먼저 신사회위험과 구사회위험을 대변한다고 조작적으로 설정한 변수들로 구분된 집단들의 빈곤율을 비교했다. 빈곤율은 절대빈곤율 과 상대빈곤율을 각각 두 가지 빈곤기준으로 나누어 비교했다. 절대빈곤율은 가구소득이 해당년도 가구원 대비 최저생계비 100%이하인 경우와 차상위 빈곤층을 포함한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경우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상대빈곤율은 가구중위소득 대비 40%, 50%이하의 빈곤비율을 측정했다. 다음으로 빈곤결정요인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서 기술통계분석에 사용한 기준을 준거로 분석했다.

4. 신·구사회위험과 빈곤

1) 신·구사회위험과 빈곤실태

구사회위험과 빈곤: 1999년 가구주가 비취업상태인 가구의 절대빈곤율은 49.9%에서 2003년 42.4%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 소득자료에 따르면 절대빈곤율이 51.1%로 외환위기 직후시기보다 절대빈곤율이 1.0%p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위소득대비 가구소득이 50%이

3) 기혼이인생계부양가구(부부 임금근로자, 남편임금근로자+부인자영업자, 남편자영업자+부인임금근로자, 남편자영업자+부인자영업자), 기혼일인생계부양가구 (남편임금근로자+부인비취업, 남편자영업자+부인비취업), 미혼단독가구(미혼 임금근로자 또는 미혼자영업자), 한부모가구(한부모 임금근로자 또는 한부모 자영업자), 제삼생계부양가구(가구주와 (또는) 배우자 모두 비취업이거나, 비취업인 미혼 가구주의 경우).

하인 비율은 동 기간 동안 50.0%에서 58.4%로 16.8% 증가했다 다시 56.3%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구의 빈곤비율은 절대빈곤은 감소하다가 최근 외환위기 직후의 수준으로 증가했다. 상대빈곤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구사회위험으로 지칭된 가구주의 노령화와 관련된 빈곤실태를 살펴보면 절대빈곤율은 1999년 59.0%에서 2003년 48.3%로 18.1% 감소했다가 2005년에 오면 외환위기 직후의 수준인 50.8%수준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위소득 50%이하를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율은 1999년과 2003년은 각각 68.3%, 68.4%로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05년에 오면 4.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사회위험과 빈곤: 신사회위험과 관련된 빈곤실태를 보면 구사회위험과 관련된 빈곤율의 변화와 같이 신사회위험과 관련된 빈곤율 변화의 양상은 전체적으로 절대빈곤율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상대빈곤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태를 보인다. 먼저 남성일인생계부양자가구(1인생계부양자가구 1)의 절대빈곤율을 보면 1999년 18.0%에서, 2003년 9.0%로 절대빈곤율이 절반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05년 자료를 보면 남성일인생계부양자가구의 절대빈곤율은 26.3%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보다도 무려 8.3%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이인생계부양자가구의 빈곤율은 남성일인생계부양자가구와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감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05년 절대빈곤율은 외환위기 직후라고 할 수 있는 1999년에 비해 3.3%p 낮게 나타났다. 중위소득 50%이하의 상대 빈곤율을 보면 남성일인생계부양자가구의 빈곤율은 외환위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인생계부양자가구의 빈곤율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 내 돌봄 필요여부를 보여주는 노인과 아동유무에 따른 빈곤율을 살펴보면, 먼저 노인부양부담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의 절대빈곤율은 1999년 45.5%에서 2003년 38.0%로 16.5% 감소했다가 2005년에 오면 1999년 수준보다도 4.8%p 높은 50.3%로 나타났다. 6세 미만 아동양육여부에 따른 빈곤율은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모두에서 노인부양과 관련된 빈곤율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된 가구의 빈곤추이를 살펴보면, 절대빈곤율은 상용직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임시일용직은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이어졌고, 자영업자는 분석 기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상대빈곤율을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에서 감소세를 보인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집단 간의 빈곤비율의 차이가 1999년에 비해 2005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2) 신·구사회위험 변수와 빈곤지위

1999년, 2003년, 2005년 절대빈곤지위와 관련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구사회위험과 관련된 변수들을 보면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가구주의 취업여부는 1999년과 2003년 모두 절대빈곤지위는 물론 차상위빈곤지위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005년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구주의 취업여부가 절대빈곤지위와 차상위빈곤지위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에 대한 사회적 위험을 대변하는 가구주의 연령은 빈곤선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시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사회위험과 절대빈곤지위와의 관련성을 보면 이인생계부양자가구가 절대빈곤에 처할 가능성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인생계부양자 여부가 빈곤지위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더 그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 가족 내

돌봄 필요와 관련된 가구의 빈곤지위를 보면 6세 미만 아동의 양육여부는 모든 년도에서 절대빈곤 지위와는 관련이 없지만 1999년과 2003년 자료에서는 차상위 빈곤지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양부담은 모든 년도에서 빈곤지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절대빈곤지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능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자녀 유무와 절대빈곤지위는 1999년 자료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구가 절대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1.28배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대변하는 가구주의 고용지위를 보면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가구주가 상용직 종사자인 경우 절대빈곤에 처할 가능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1999년에는 74.7%, 2003년에는 그 보다 6.5%p 낮은 68.2%, 2005년에는 6%p 증가한 74.2%로 나타났다. 1999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경우 절대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30.6% 낮았다. 그러나 2003년에 자료에 따르면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경우와 다른 종사상 지위를 갖는 경우 절대빈곤지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2005년 자료에 따르면 극적으로 변화하는데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무려 4.0배($b=1.385$, $p < .00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의 상대빈곤지위와 변수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절대빈곤지위와는 관련 없던 가구주의 취업여부가 중위소득 40%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99년, 2003년, 2005년 모든 년도에서 상대빈곤지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과 관련된 또 다른 전통적 원인인 노령과 상대빈곤간의 관계는 모든 년도와 가구중위소득 40%, 50% 기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사회위험과 관련된 결과를 보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소 증감이 있었지만 1999년에 비해 2005년에 이인생계부양자가 다른 생계부양형태가구에 비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과 관련된 변수들을 보면 6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와 상대빈곤지위는 외환위기 직후라고 볼 수 있는 1999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2003년과 2005년을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5세 노인여부는 가구의 상대적 빈곤과는 2005년 자료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자료 분석에 따르면 두 가지 상대빈곤기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여러 가지 기술적·방법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복지국가의 역할에 관한 유의미한 정책함의를 전달 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무엇보다도 한국사회에서 전통적 복지국가에 대한 과제(일인-주로 남성-생계부양자가 노동시장에서 직면하는 노령, 실업 등 사회적 위험을 완화시키는 것)가 여전히 유효한 정책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구사회위험을 대표하는 가구주의 취업과 노령여부는 여전히 가구의 빈곤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전통적 사회위험과 관련된 변수들이 가구의 빈곤지위와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구주가 비취업상태에 있고, 노령인 경우 해당 가구들 중 상당한 규모가 빈곤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한다면 결국 한국사회에서 신사회위험의 확대에 따른 복지국가의 대응방식은

산업화된 서구 복지국가와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는 산업화된 서구 복지국가들이 기존의 복지자원을 구사회위험에서 신사회위험으로 이전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이를 위해 새로운 정치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과는 상이한 처지와 조건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구사회위험이 여전히 존속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신사회위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 노령 등 구사회위험에 대한 사회보장(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대응은 이제 정책대응을 고민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즉, 한국사회의 과제는 복지자원을 구사회위험에서 신사회위험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아닌 두 가지 위험의 동시적 완화·해소를 위해 복지자원의 절대량을 확대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복지국가의 과제를 이해한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회서비스국가, 사회투자국가로 대변되는 한국복지국가의 전망과 역할에 관한 논의는 구사회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써 결과의 평등과 관련된 가족과 개별 구성원들의 소득·건강·주거 등을 담보하는 동시에 기회의 평등으로 간주되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포괄해야 한다.